

의안 번호	925	【울산광역시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b>검 토 보 고 서</b>
----------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제출자 : 2012. 08. 29(수)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2. 08. 29(수)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12. 09. 10(월)

## 2. 제안설명 요지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위임된 사항으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진단 등을 신고 없이 행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마련(안 제3조)
  - 의료기관이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사람
- 나. 과태료 부과기준(안)
  - 1차위반 : 100만원, 2차위반 : 200만원, 3차위반 : 300만원
- 다.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 기회 제공(안 제8조)
- 라. 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6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안 제9조)

##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5. 근거법규 :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제26조

## 6.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 다. 관련부처 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사항 : 2012. 6. 4. ~ 6. 25.(의견없음)

## 7. 검토의견

- ☐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등의 신고의무 및 동법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임
- ☐ 주요내용
  - ▶ 지역보건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마련(안 제3조)
  - ▶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별표1)
  - ▶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에게 이의제기 기회제공 (안 제8조)
  -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규정 (안 제9조)
  - ▶ 수납되는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안 제11조)
- ☐ 의견으로서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횟수 등에 따른 구체적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형평성 논란과 이의 제기가 예상 되고, 과태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적으로 울산광역시 소재 타구·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 우리구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 관계법령

### § 지역보건법

**제18조(건강진단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등을 행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